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2024~2028]

2024. 1.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원양산업 현황	3
III. 비전 및 추진전략	7
IV. 세부 추진계획	8
1.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8
2. 안정적인 선원수급	10
3. 해외어장 확보	12
4.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15
V. 추진일정	18

I 추진 배경

1 계획 개요

- (원양산업 개념)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하여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

* 태평양·대서양 등 공해수역,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과의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

- (근거) 「원양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대상기간) '24~'28년

* 제1차 종합계획('09~'13) → 제2차 종합계획('14~'18) → 제3차 종합계획('19~'23)

- (주요내용) 수산자원 보존·관리,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제협력 확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등

2 추진 경과

- (제1차 종합계획^{'09~'13}) 어장·어선세력 확대, 국내외 수산 인프라 구축, 원양어업 경쟁력 회복과 외연 확대에 중점

- (제2차 종합계획^{'14~'18})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국제 수산기구 내 활동 강화 등 원양어업 모범국으로 변화

*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

구 분	주요 성과
제1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09~'13)	▶ 국내 수산물 공급기반 강화(원양생산 : ('09) 60.5만톤 → ('14) 67만톤) ▶ 「원양어업 통계조사」 통계청 승인 통계 지정('12) ▶ 스페인 라스팔라스 내 해외수산협력센터 개소('13.9월)
제2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14~'18)	▶ 선박위치추적장치, 조업감시센터 등 선진어업관리 시스템 구축('14.3월) → 대한민국 예비 IUU어업 국가 지정 해제(美 15.2월 / EU, '15.4월) ▶ 항만국조치 등 국제규범 적극 대응, 의장국 진출* 등 국제 영향력 강화 <small>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small> * CCAMLR 이행위원회 의장('17), WCPFC 총회 의장('18)

- (주요내용) 지속 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추진과제 수립

* ①어선안전, ②어장개척, ③선원복지, ④산업구조, ⑤국제협력

- (성과)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정책지원 및 모범 조업국으로 평가

-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지원*을 통해 선박안전 및 선원안전 제고

* 원양어선안전펀드('19~)를 통해 7척(채낚기 5 + 트롤 2) 신조 지원(총 459억원)

- 연안국 ODA 지원과 입어협상을 연계하여 유리한 조업조건* 확보

* 한-투발루 협상 시, ODA 계기로 입어로 동결 등 연 100만 불 절감 효과('22~'23)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예비 IUU 어업국 해제**('21)

* IUU어업을 통한 불법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원양산업발전법」 개정, 19),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운영 고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 제정 등('21)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관리수역 불법조업 이유로 미에서 지정('19)

- (과징금) 원양어선 2척*, 운반선 1척** 대상 총 5억원 부과('19~'23)

* ('22) 어획실적 미보고 1척, 2억원 / ('23) 보존관리조치 위반 1척, 1억원

** ('23) 보존관리조치 위반 1척, 2억원

-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모범조업국*으로 평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 WCPFC 최우수 자료제출국 3연속 선정('21~'23),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SPRFMO·WCPFC 국제옵서버 인증

- (한계) 선원 수급 안정화, 신규어장 확보, 어선 현대화 확대 노력 필요

- 국적 원양어선원 감소세 지속, 신규 선원 육성 지원 필요

* 국적 선원 수/비중 : ('15) 1,492명 / 30.7% → ('20) 1,389 / 23.5 → ('22) 1,296 / 22.5

- 해외수산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주요 어장국 ODA 확대 필요

* 원양 생산량 감소세('18, 46만톤 → '22. 40만), 기존·신규 어장 쿼터 유지·확대 필요

** 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은 태평양도서국 등에 학교·병원·도로 등 ODA 지원 中

- 선령 31년 이상 비율이 81.4%로('22), 대체건조 확대 필요

* 척수/비율 : (~10년) 16척 / 7.8% → (11~20) 9 / 4.4 → (21~30) 13 / 6.4 → (31~) 166 / 81.4

Ⅱ 원양산업 현황

1 원양산업 일반

- (생산) 원양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총 40만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60만톤의 11% 수준('22년 기준)

* (양식) 227만톤 / 62.9% > (연근해) 89만 / 24.6 > (원양) 40 / 11.1 > (내수면) 4.3 / 1.4

[원양어업 Vs. 연근해어업]

구 분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조업수역	공해 /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내 연안 / 우리나라 EEZ
어선규모	200톤 이상	(연안) 10톤 미만 / (근해) 10톤 이상
주요어종	참치 / 명태 / 오징어 / 대구 등	멸치 / 고등어 / 갈치 / 참조기 등

- (수출) 수산물 10대 수출품목* 중 원양수산물 72%(412천톤/570천톤), 수산물 총수출액 중 원양수산물 34.3%(10.8억불*/31.5억불)

* ①김 ②참치(6억불), ③명태(2.6억), ④대구(1.3억), ⑤게 ⑥이빨고기(0.9억), ⑦연어 ⑧굴 ⑨고등어 ⑩전복

- (기업) 총 39개사('22년 기준) 중 중견기업 8개(21%), 중소기업 31개(79%)

* 매출 : (100억원 미만) 10개사 → (100~500) 14 → (500~1,000) 3 → (1,000 이상) 8

** 보유 어선 : (10척 이하) 34개사(중소 30 + 중견 4) / (10척 초과) 5개(중소 1 + 중견 4)

- (종사자) 전체 원양어선원 수는 보합*, 국적 선원 비율** 감소

* 전체 선원 수 : ('10) 5,898명 → ('15) 4,866 → ('20) 5,911 → ('22) 5,749

** 국적 선원 수/비중 : ('15) 1,492명/30.7% → ('20) 1,389/23.5 → ('22) 1,296/22.5

- (어선) 총 204척 중 참치 어선 66.7%, 선령 31년 이상 81.4%*

* 척수/비율 : (선령 10년 이하) 16척/7.8% → (11~20) 9/4.4 → (21~30) 13/6.4 → (31~) 166/81.4

[업종별 원양어선('22)]

구 분	합계	참치연승	참치선망	트롤	오징어채낚기	공치봉수망	저연승·통발
어선 수(척)	204	108	28	15	21	19	13
생산량(천톤)	400	눈다랑어 18 황다랑어 12	가다랑어 202 황다랑어 40	남극크릴 31 명태 22	오징어 28	공치 3	이빨고기 4 대구 2

- (어장) 남태평양 도서국(투발루·키리바시 등, 참치)에서 원양수산물의 50% 이상을 생산, 남서대서양*(오징어), 남극해(이빨고기)에서도 조업

* 국제수산기구 부재, 별도 쿼터 배분 없이 각국 원양어선 경쟁조업

- 연안국의 입어료 인상, 투자·ODA-조업쿼터 연계 정책으로 조업 비용 증가 및 지역수산기구 조업감시·규제 강화

* '23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총 쿼터량은 62천톤, 중국·대만·일본 등과 경쟁 조업 양상

[우리나라가 조업쿼터를 받는 지역수산기구(RFMO)]

구 분	기구명	기구별 관할 해역도
참치 지역수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비참치 지역수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 CCAMLR : 총 어획량만 결정, 국가별 배분 없이 올림픽 방식(선착순)으로 조업

- (국제규범) IUU 어업 근절, 조업 안전 확보 등 규제 강화 추세

- (IUU 어업) 지역수산기구는 국가별 어획쿼터 배분 시 옵서버 승선 등 과학적 기여도*, 보존관리조치 이행 수준을 반영

* △자원 현황파악·평가를 위한 과학조사, △어획보고, △규제 준수 감시·감독 등 수행

- (자체조치) 국가별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항만국 검색(PSMA) 강화, 어획증명서 발급 등 회원국의 자발적 노력을 더욱 강조

- (어선안전기준) 어선 국제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케이프타운협정*(CTA)을 채택(19), 발효 임박**,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중

* 24m 이상 공해조업 어선 대상, 선체 구조·복원성, 구명설비 등 선박 안전기준 규정

** (요건) ①22개국 비준, ②등록어선 3,600척 달성 1년 후 / (현황) ①21개국, ②2,603척

□ (대내) 생산 감소, 낮은 수익비, 어선원 감소

- (생산) 연안국 자원관리 강화, 공해조업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세 지속*

* 원양생산량 : ('90) 92만톤 → ('10) 59 → ('15) 58 → ('20) 44 → ('21) 44 → ('22) 40

- (수익성) 저가 어종(가다랑어·꽁치·크릴 등) 중심 어획으로, 톤당 생산액*(생산액/생산량) 기준 수익성 제한

* 톤당 생산액 : ('90) 53만원/톤 → ('19) 220 → ('20) 239 → ('21) 304 → ('22) 282

- (종사자) 원양어선 기피로 신규 유입 제한*, 고령화 심화**

* 수산계 고교 졸업생 : ('17) 762명 → ('21) 542 / 수산계 취업률 : ('17) 53.4% → ('21) 25.8

** 연령별 비중 : (30세 미만) 10.8% → (3~40대) 6.6 → (50대) 46 → (60세 이상) 36.6%

- (기업) 총 39개 기업 중 성장기업은 10개 내외*

* 대부분 총자산 감소 추세, 어업 외에 가공·유통도 병행하는 기업은 성장

□ (대외) 세계 수산물 소비는 증가, 조업규제는 강화

- (세계시장) 건강식품 인식 등 세계 수산물 소비 증가가 전망*되며, 생산에서는 양식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원양어업 등 어획 비중 감소세**

* ('17) 1억 7,200만 톤 → ('28) 1억 9,600만 (+14%, OECD-FAO)

** (어획) ('10) 9,110만 톤 → ('20) 9,030만 / (양식) ('10) 7,150만 톤 → ('20) 8,750만

- (연안국 정책) 조업국에 대한 ODA·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쿼터·입어료와 연계

*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러시아·뉴질랜드 등 9개국 현지합작법인 총 19개사(총 60척) 합작생산량 : ('16) 33만톤 → ('17) 35 → ('18) 38 → ('19) 37 → ('20) 33 → ('21) 30

- (국제조업규제) 전형적인 IUU 어업*뿐만 아니라, 강제노동(forced labor), 선원인권 침해행위**를 새로운 유형의 IUU 어업 행위로 규제 추세

* 과거 美(2회, '13.1월/'19.9월), EU(1회, '13.11월)에서 한국을 예비 IUU국 지정·해제

** (지역수산기구) WCPFC는 어선원 노동기준 개선 조치 논의 착수('21.7월)

(어선원노동협약) 기본 휴식시간 보장,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정(한국 미가입)

(정부·NGO) 미 국무부, 환경정의재단(EJF) 등에서 강제노동-IUU어업 연계 움직임

〈 주요국 원양산업 정책 동향 〉



중 국 원양어선 현대화, 국제협약 이행 지원

- ▶ **(현대화)**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수리·개조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항법시스템·원격단말기 등 기자재 보급 확대
 - * 원양어선 현대화에 약 11억 위안 지급('20, 약 2,007억원, OECD Fisheries Support Estimate)
- ▶ **(거점구축)** 국가 주도로 어업-양륙-가공-유통을 집적한 원양어업기지* 건설('19)
 - * 절강성 주산 : 전용부두·가공단지·콜드체인 유통시설 등을 집적화
- ▶ **(협약이행)** 책임조업(자원보존조치 등) 이행평가에 따라 기업 보조금 지급
 - * 절강성 주산 : 20개 기업(328척) 대상 국제협약 이행 보조금 4.5만 위안(약 800억 원) 책정



대 만 원양어선원 양성, 외국인선원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

- ▶ **(인력교육)** 원양어선원 양성과 승선 장려를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 * 연간 6명의 수산계 대학 졸업생을 선발하여 포상·직업훈련 지원
- ▶ **(송출국과 선원협력)** 인니 수산노조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선원 유입
 - * 가오슝시 원양협회-인니 수산노조('22) : 기술훈련·학술교류 강화, 외국인선원 인권보장 등
- ▶ **(근로환경)** 「어업인권 7대 전략('22~'25)」 수립
 - * 휴식시간 보장, 16개 주요 정박 어항 휴게·숙박시설 운영, 선상 인터넷(Wi-fi) 설치 지원 등



일 본 원양어업 구조개혁, 해외어장 활용 위해 국제협력

- ▶ **(구조개혁)** 수익성 회복(어장 예측, 설비 고도화 등), 자원관리·노동환경 개선형 어선 도입 등*
 - *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20~'23)」 : 참치연승, 외줄낚시, 저인망 등 포함
- ▶ **(어장확보)** 태평양도서국 등 연안국, 지역수산기구(IOTC 등)과 함께 △시설·기술보급, △자원관리·활용, △ 어선원·지도자 교육·양성 지원 등 협력('22년 690백만엔, 약 66억원)



E U 아프리카·남미 지역별 수산협력사업 추진, 입어 기반 구축

- ▶ **(서아프리카)** 어촌·어항 현대화 지원
 - * 세네갈 : 프랑스·스페인(연 90만 유로, ~'24), 네덜란드('Senegal Fish' 프로젝트, ~'23)
 - ** 모리타니 : 독일(소형 어항 현대화, ~'27), EU(어촌공동체 지원, 연 1,650만 유로, ~'27년)
- ▶ **(동아프리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역량 교육(마다가스카르)
 - * 스웨덴 : 수산·양식·관광 / 독일 : 자원보호·이용 프로젝트 / EU : 양식 프로그램
- ▶ **(남미)** 전통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에콰도르 마나비)
 - * 이탈리아 : 수산자원 보전·관리, 수산인프라 개선 등 / 스페인 : 어구·어업기술 고도화 등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모범국가 도약
목 표	<p>◇ 원양어업 생산금액 : ('22) 1.1조원 → ('28) 1.5조원(연 5% ↑)</p> <p>◇ 원양산업 ODA 비중* : ('23) 7% → ('28) 10%(목표, 43% ↑)</p> <p>* 해양수산부 ODA 중 원양산업 관련 ODA</p> <p>◇ MSC 인증기업 : ('23) 6개 → ('28) 12개(100% ↑)</p> <p>◇ 옵서버 육성(누적) : ('23) 67명 → ('28) 80명(19% ↑)</p>
추진전략	추진과제
①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p>① IUU 어업 대응체계 고도화</p> <p>② 지역수산기구 참여·협력기반 강화</p>
② 안정적인 선원수급	<p>①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p> <p>② 원양어선원 삶의 질 개선</p> <p>③ 외국인 원양어선원 보호·관리</p>
③ 해외어장 확보	<p>①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p> <p>② 해외어장 진출 지원</p>
④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p>① 안전·복지형 원양어선 확대</p> <p>②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화</p> <p>③ 원양기업 경쟁력 강화</p>

IV 세부 추진계획

1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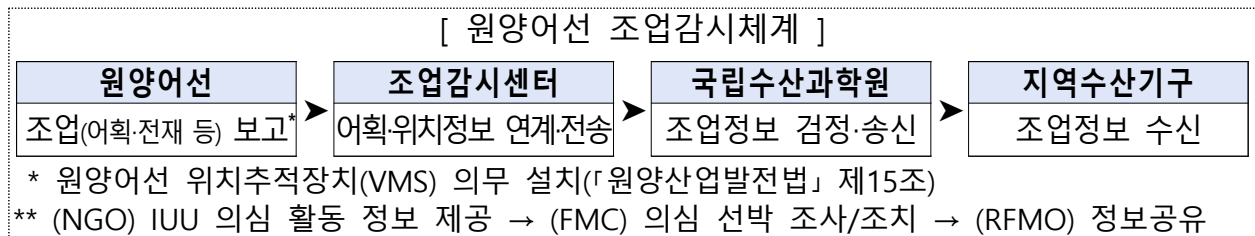
1 IUU 어업 대응체계 고도화

□ (제도) 국제공조, 항만국검색* 강화 등으로 IUU 어획물 유입 차단

*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해 IUU 어선 입항, 불법어획물 반입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

○ (국제공조) 조업감시센터*(FMC)와 지역수산기구(RFMO), 비정부기구(NGO) 등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IUU 어업 감시 능력 확장

* 원양어선 조업 과정 실시간 감시, 원격 지도·점검, 양륙량 검증 등 수행('14.5월~)



○ (검색확대) 운반선, 목록 미등재* 어선 등도 직·간접적 IUU 어업 관여 의심 시(제보·정황 등), 감시 대상에 포함하여 검색 강화

* 각 지역수산기구는 관할 수역 내 IUU 어업 적발 시, 해당 어선 IUU 목록 등재

□ (인력) 옹서버 의무승선율* 상향에 대비, 인력 확충('23년 67명)

* 조업감시·과학조사 위해 의무 승선, 지역수산기구는 의무승선율 상향(5→20%) 논의 중

○ 수산자원 평가를 위한 과학조사, 선내 불법행위 감시 등 역량 강화

□ (기술)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개발·도입, 옹서버 미승선 선박의 IUU 어업 예방

* 인공지능(AI) 기반 조업영상 녹화·분석을 통해 현장 불법행위 통제, 과학자료 수집 강화

○ 태평양 참치 수산기구(WCPFC·IATTC)에서 '25년 EM 도입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EM 도입·운영을 위한 국내 법·제도 마련

* 참치연승 → 타 업종 확대, 과학자료 수집, 조업감시 등을 위한 기술·제도적 문제 해소

□ (의제 주도) 지역수산기구 국제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

- (롤메이커) 기후·노동 등 의제 발굴,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보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여 지역수산기구 내 영향력·발언권* 강화

* 단기 조업이익에만 치중하여 국제규범 회피 시 IUU 어업 등 문제에 대해 쉽게 비난(easy target)받고, 어업권 주장 시 타국 설득·수용이 어려워져 지속가능한 조업이익 훼손 우려

[원양어업 국제규범 동향]

▶ (주요기관) 지역수산기구*가 중심,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무역기구*** (WTO) 등도 연관

* 총 17개, 5개 참치 기구에서 전체 공해의 91% 관리 / ** 어선 안전기준 / *** 수산보조금 규제

▶ (주제) 공해 수산자원 보존, IUU 어업 근절, 해양생물 보호*, 어선원 강제노동 등 다변화**

* UN 해양생물다양성협약(BBNJ) 채택('23)→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수산자원 관리 외 해양생물 보호, 강제노동 등 규범에 대한 관심 강화 및 무역 규제와 연계 추세

□ (네트워크)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 공동행동 적극 동참

- (의장단) 국제수산기구 및 회원국과의 소통·유대 강화를 통해 입어 교섭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여국* 위상 공고화

* 의장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당 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로 평가

('23) WCPFC-IOTC 의장, SEAFO 재정위 의장, CCSBT 부의장 등 5개 기구 의장단

- (공동행동) IUU 어업 근절*, PSMA 이행^{항만국조치협정}**, 국제 공동 자원조사에 주도적 참여, 국제규범 주도국과 협력관계 유지·강화

* IUU 행동연합(미·영·캐나다, 노르웨이 등 참여) 가입 및 회의 개최·참여 등

** UN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검색관 교육·훈련 지원 등

□ (인력) 규범논의, 어업협상 등 대응 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 추진

- 지역수산기구, FAO 등에서 논의되는 국제규범·선언 도입 효과 검토, 국제협상전략 수립 등에 상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 FAO 협력 아·태 지역 항만국 검색관 교육 등 현장 실무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

- 신진연구자, 민간경력자, 산·학·연 채용연계 등 양성경로 다각화

□ (수산계고교) 수산계 고교-선사 간 연계를 통해 어선 승선 확대

- (장학제도) 어선 승선 진로를 정한 학생에게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수여하고, 향후 대학 진학, 학점이수 등 학업 병행 지원
- (산학연계) 전·현직 원양선원을 일일교사로 파견(선사→학교)하여 실무교육, 진로상담 등 지원
- (설명회) 학교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해기사 진로 소개, 질의응답·상담 등을 통해 진솔하게 소통하는 설명회 실시

□ (어선해기사) 일반인 대상 단기 어선 해기사 배출

- (지원확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오션폴리텍 과정) 어선 해기사 양성 과정(5급 40명, 6급 20명) 지원율* 제고를 위해 교육생 생활비** 등 지원

* 5/6급('23년 신설) 입교생 : ('19) 33명→ ('20~'21) 0(코로나19)→ ('22) 36→ ('23) 32 / 11

** 교육기간 : (5급) 총 5개월, 이론 4 + 실습 1 / (6급) 총 3개월, 이론 2 + 실습 1

- (교육생 발굴) 민관 합동*으로 귀어귀촌인, 제대군인,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명·홍보 등을 통해 교육생 적극 발굴

* 원양선사·노조, 수협 일자리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연계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 하는 청년(연 2,500명)

- (행사연계) 선원·수산인의 날 등 관련 각종 행사 시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어선 근무 희망자를 발굴하여 교육·취업 연계

□ (소득증대) 근로의욕·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유인 개선

○ (선원공제) 자산형성, 노후안정 등 지원을 위해 공제제도* 신설

* (재원) 회원 납입금, 노-사 합동 출연금 등 / (내용) 퇴직연금·적립공제, 일상복지 등

□ (복지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무여건, 복리후생 개선

○ (국제협약) 업종별 여건을 반영, 케이프타운협정(IMO)*, C188** (ILO) 등 국제 안전·인권·근로기준의 원양어업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 24m 이상 공해조업 어선 대상, 선체 구조·복원성, 구명설비 등 선박 안전기준 규정

** 어선원노동협약(ILO(국제노동기구) Work in Fishing Convention)

○ (근무환경) 해양원격의료 확대하고, 선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원양어선 개조(리모델링) 금융지원

○ (가족방문) 평균 승선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외국인 원양어선원 대상 가족 현지 방문 지원(1명당 200만원, 총 50명)

□ (인식제고) 헌신, 기여도의 공적 기념을 통해 직업적 자긍심 고취

○ (표창) 공공·민간에서 IUU 어업 근절 및 예방, 선원 양성 등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각종 포상 대상에 포함(바다의날, 수산인의날 등)

* (공공) 조업 감시, 항만국 검색, 국제규범 대응 등 / (민간) 선원(장), 국제 옵서버 등

○ (명인제도)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장기간 안전 운항·조업에 기여한 모범 선원을 매년 선정, 칭호·증서 부여 등 추진

* '대한민국명장 제도(고용부)'는 22개 분야에서 매년 30여명 내외 선정·지원('86~)

- (권리보호) 외국인선원 차별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승선여건 마련
 - (신고·감시) 원양어선 내 인터넷 보급률(100%) 활용, 신고채널* 확대, 국제 읍서버를 통한 감시 등 선상 불법행위 신고·감시체계 강화
 - * 선원복지센터 상시 콜센터(1566-3151), 전용 신고 전자메일 운영 등
 - (교육) 차별, 강제노동 등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처리 등 소통을 위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 제작·배포
 -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원양어선원 주요 국가별 언어로 번역
 - (실태조사) 노·사·정, 시민단체 등 정례 합동점검
- (교육협력) 국내-해외 선원양성기관 연계, 우수 외국인선원 양성
 - (현지양성) 주요 원양어선원 송출국에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으로 제공하고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ODA* 검토
 - * 인도네시아 등 송출국도 현지 자체 선원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
- (제도) 노사정 합의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사 도입 기반 마련
 - (합의도출) 국적 선원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 원양어선 외국인 기관사* 도입조건 합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 추진
 - * 기관사는 상선·어선 공통 면허로, 상선으로 이직하거나, 육상 수리직 등으로 이탈 빈번
 - ** 외국인 기관사 도입 필요성은 원양 노사간 인식 공유(노사합의서 체결, '19.11월)
 - (시범사업) 참치연승 등 기관사 수급 불안 해소가 시급한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사 도입을 시범 시행

1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ODA 확대)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원조(ODA) 확대 추진

- (태평양도서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어장국* 수요를 반영,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과 주민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를 연계 지원

* 투발루·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어장 어획량이 국내 원양어업 생산의 50% 이상

- (미입어어장보유국) 아프리카* 등 어장보유국가 대상 자원관리, 어업기술 이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ODA 사업 제안**

* (중국·EU 등) 아프리카 어장 진입 위해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역량강화 등 지원

** 어장성 확인 후 조업여건, 수원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연안국 ODA 사업(예시)]

어촌·어항 인프라 구축	수산자원관리	수산업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접안시설 건설 ▶ 가공·유통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 장비 지원 등 ▶ 자원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어법 보급 ▶ 품질관리, 인증제도 등 ▶ 해양환경 개선(폐어구 수거 등)

□ (투자 강화) ODA 지원 확대 및 기업 투자로 연계

- (비중확대) 원양어장국 ODA는 조업쿼터 확보, 입어료 절감 등 수산물 수급과 직결, 안정적 어장 확보*를 위해 규모 확대**

* 연안국은 어업협상 시 조업쿼터·입어료 등을 ODA 지원 규모와 연동하여 결정

** (23) 해양수산부 ODA 중 원양산업 관련 ODA 비중은 7% 수준

- (민간투자) ODA로 건설·설치한 어항, 냉동창고 등의 운영, 기술인력 파견, 현지인력 훈련 등을 통해 기업 어장확보 및 현지투자 여건 조성

□ (인적 교류) 연안국과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

- 친한인사 박사급 전문가 양성,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장학사업을 통해 수원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현지 공관에 해양수산 관계관 파견*

* 주피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기관급 파견(24.1), 국제수산외교 네트워크 구축

□ (어장개척)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해외어장 확대

- (아프리카*) 대중성 어종인 민어·조기·갈치 등 자원 풍부, 어업 기술 전수**, 장비 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해 조업 타진

* '15년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한국어선 감척, 소수 합작어선만 조업 중

**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한국 수산기술 전수 요청 증가

- (북태평양*) 선호도 1위 어종 오징어 풍부, 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어구·어법 개량** 등 지원

* 오징어유자망 금지(UN총회 결의, '89)에 따라 '93년부터 한국어선 조업 중단

** 일본 채낚기어선은 신형 어구를 사용하여, '17년부터 북태평양 오징어 조업 중

□ (자원조사) 기존 어장 유지, 대체어장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남서대서양) FAO 41 어장(원양오징어 99% 생산) 유지*를 위해 자원 분포, 이동 특성 등을 파악(국제 공동연구),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비

* UN 해양생물다양성협약(BBNJ) 채택('23)으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돼 지역수산기구 역할 강화 전망, FAO 41은 지역수산기구가 없어 조업 제한 가능성

- (러시아) 조업 어종*의 자원량, 감소 원인, 이동 경로 등 조사

*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명태·오징어 등 국내 어선 조업쿼터 결정

- (북극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꽂치 등 자원 북상, 러시아·북태평양 조업선박*,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공동 조사

* 중층트롤, 대구저연승, 꽂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 등

[주요 어종별 국내 원양어선 조업어장]

어 종	조업어장	원양생산량 추이(천톤)
명 태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	('18) 24→ ('20) 27→ ('22) 22→ ('23) 28(잠정)
오징어	FAO 41(남서대서양) 등	('18) 34→ ('20) 37→ ('22) 48→ ('23) 33(잠정)
꽂 치	북태평양	('18) 23→ ('20) 6→ ('22) 3→ ('23) 3(잠정)
가다랑어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등	('18) 239→ ('20) 215→ ('22) 202→ ('23) 200(잠정)

□ (어선)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를 위해 노후 어선 신조 및 수리 자금 지원

- (신조) 원양어선안전펀드를 통해 선령 30년 초과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신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 경영적자 지속, 선가 상승 등으로 건조자금 조달·회수가 어려워 선사 참여 제한
→ 쿼터 추가 배분, 허가 추가발급 등 검토

[원양어선안전펀드 개요]

- ▶ (자금구성*) 정부출자금 5 + 금융기관(선박담보대출) 3 + 선사 자부담 2
* 조성목표 : 총 1,860억원(~'26, 정부출자 930)
- ▶ (운영) 원양어선안전펀드를 통해 건조한 선박은 선박대여회사(SPC) 소유, 선사는 3년간 자금(자부담분) 거치 및 12년간 용선료 납부 후 선박 소유권 취득
- ▶ (현황) 오징어채낚기 5척, 트롤 2척 총 7척 신규 건조 완료*(~'23)
* 정부지원액 : 총 458억원(총 건조가액 921억원의 50%)

- (개조) 저탄소 설비 도입, 조업·생활공간 개선 등 친환경·안전성,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수리·개조비용에 대해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 (기자재) 친환경 어구·설비 등 용자 지원

- (어구) 그물, 집어장치 등 유실 폐어구를 통한 비의도적 어획, 해양 생물 피해, 해양오염 등 저감을 위해 친환경 어구* 설치 지원

인도양항치위원회 전미열대항치위원회 대서양항치보존위원회 중서부대평양수산위원회
* IOTC, IATTC('19), ICCAT, WCPFC('21) 등에서 비열함·생분해성 집어장치 사용 권고

- (설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대체 냉매, 냉동설비 등 교체 지원

* 기존 냉매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악영향으로 '30년 이후 완전 퇴출 계획

□ (판로)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연계, 안정적 판로 확보·신시장 확대

- (원료공급) 「수출진흥구역*」 입주기업 등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원양선사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양수산물 판로 다각화**

* 원료 수급과 물류 환경이 좋은 항만 인근 부지에 수산식품 전용부두, 냉장·냉동 시설, 검역·검사·통관시설 등 수입-가공-수출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 다랑어류의 70%는 태국 등에 통조림 원료로 수출, 명태·오징어·꽂치는 국내 판매

□ (가공) 원양수산물 기반 간편식 개발

- (간편식) 중견 원양기업(동원·사조 등), 중소식품기업* 등과 연계하여 명태, 오징어 등을 활용한 스낵, 밀키트 등 제품개발, 입점 등 지원

* 전국 7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연계, 제품개발·홍보·판로확보 등 지원

- (고급화) 기존 강정, 죽·덮밥 등 일반식 외 참치 스테이크, 대구 피시앤칩스 등 고품질 즉석조리식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수산가공 간편식품 해외 사례]

			
일본 오징어튀김	중국 오징어 볼	태국 손질 고단백 참치	태국 참치 스테이크

□ (마케팅) 국제인증 획득 지원 및 원양산 수산식품 홍보

- (인증) 미국·일본·EU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 중인 가치소비* 추세에 부합하는 국제인증 획득 지원

* 수산물 수입 시 지속가능성·모범어업 관련 유일 국제인증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제품 선호 추세, MSC 인증 참치(원물)는 4~6% 높은 가격에 판매

- (홍보) 국제인증(MSC 등) 획득 원양수산물, 원양산 수산가공식품 국내외 홍보·판촉* 강화

* 해외 10개 무역지원센터, 국제수산박람회, 캠페인·라이브 방송 등 전시·행사에 노출

□ (해외투자) 합작법인* 설립과 현지 조업·가공·수출시설 건립을 지원

* 연안국 자원자국화,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에 따라 현지 합작어업 중요성 증가
국적/합작 생산량(만톤) : ('18) 46 / 38→ ('19) 51 / 31→ ('20) 44 / 33→ ('21) 44 / 30

- 양해각서(MOU) 체결, 수요 맞춤 ODA 등을 추진하여 합작사업 수행, 수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연안국 투자·협력 강화

□ (경영안정) 高환율·금리에 대응, 입어료·선원임금 등 부담 완화 지원

- (경영자금) 환율*·유가 등 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해외수역 입어료, 외국인선원 임금 등 외화결제 빈번

- (긴급지원) 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외수역 입어 포기*, 조업 중단 등 경영 위기가 발생한 원양기업 대상 정책지원 방안 검토*

* 러-우 사태 발생 당시, 러시아 수역 입어 가능성 확인 과정에서 입어 지연·손실

□ (제도개선)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 제도개선 추진

- (수요발굴) 업종별 원양기업, 원양선원노조 등과 정기·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제도개선 수요를 조기 파악하고 적기 해소

- (구조개편) 어선 현대화,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 정부 정책방향의 설명·설득*을 통해 노사정 합의 도출, 법령 개정 등 추진

*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 확대

V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24	'25	'26	'27	'28
1.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① IUU 어업 대응체계 고도화	제도적 관리 강화					
	국제옵서버 인력 확충					
	전자 모니터링(EM) 개발·도입					
② 지역수산물기구 참여협력기반 강화	원양어업 국제규범 논의 대응					
	국제 수산네트워크 참여					
	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					
2. 안정적인 선원수급						
①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	수산계고교 활성화					
	어선해기사 희망자 발굴·육성					
② 원양어선원 삶의 질 개선	선원공제제도 마련					
	복지·근무여건 개선					
	표창수여 등 인식 제고					
④ 외국인 원양어선원 보호·관리	외국인 선원 권리보호					
	외국인 선원 양성					
	외국인 기관사 도입 기반 마련					
3. 해외어장 확보						
①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연안국 맞춤형 ODA 발굴					
	민간투자 연계					
	인력 교류 활성화					
② 해외어장 진출 지원	신규 해외어장 확대					
	해외어장 탐색·조사					
4.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① 안전·복지형 원양어선 확대	원양어선 신조·수리 지원					
	친환경 어구·설비 등 용자 지원					
②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원양수산물 간편식 개발					
	국제인증 획득, 홍보 지원					
③ 원양기업 경쟁력 강화	해외투자 촉진					
	경영안정 지원					
	양방향 제도 개선					